

이재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택

“위성정당 반칙 대응·준연동제 취지 살려 승리의 길 찾을 것”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위성정당 등장 막지 못한 점 사과”
소수정당 몫 배려하면 비판 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가운데, 이 대표가 제안한 ‘통합형비례정당’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여러 세력이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 민주 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한 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당 의원들이 자신에게 위임한 비례대표제 실시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다수 확보한 정당이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준연동형제의 특성 때문에, 20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이라는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바 있다.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위성정당의 등장에 거대 양당은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4년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거대 양당 주축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엔 변명할 수 없다.

이 대표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리고, 약속

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당 지도부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여당과 달리 이 대표는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제안했다. 이 대표의 회견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을 30% 할당하거나 권역별 최소득표율 3%에 1석을 우선배정하는 방

안을 포함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배려하려고 했다.

이 대표가 위성정당 등장을 막지 못했음에도 비례정당에 소수정당 몫을 다수 배려하면 비판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명부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을 올려 당선시킨 바 있는데, 지난 총선보다 소수정당을 위한 배려 몫이 많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정당 ‘새진보연합’을 출범한 용해인 의원은 “정권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제22대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그리고 개혁적인 연합을 구축하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심판을 넘어, 거부권통치도 끝장내고, 시행령 통치도 멈춰세우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혁을 이루는 큰 승리를 향해 담대하게 연합하자”고 제안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의 입장으로

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면서 “물론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탈당과 이원욱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결정에 대해 “완전히 폄수”라며 “4년전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 등 나머지 당을 합해서 위성정당을 만든 것과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에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민주당과 연합이 가능한 세력을 찾는 데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몫으로 당선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검찰 수사권 조정 국면 등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과 합당한 전력이 있어 고심이 거듭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285@metroseoul.co.kr

與 영입인재, 험지로… 고동진은 신청 ‘아직’

(前 삼성전자 사장)

수원·화성·군포 등 野 텃밭에 도전장
고동진, 전략공천·비례대표 예상
대통령실 인사는 양지행… 대조 평가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가운데, 여당 영입인재들이 야당 강세 지역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영입인재들도 있어, 이들은 당에서 전략공천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입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까지 더하면 국민의힘에 입당한 영입인재는 총 29명이다.

현재 지역구 5곳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는 경기 수원 지역의 경우 김현준 전 국제장사(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이 신청한 상태다.

수원갑의 현직 의원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며, 수원병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다. 수원정의 경우엔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4선 도전을 공식화한 곳이다.

최근 영입된 40대 청년인재 3명 역시 모두 민주당 텃밭인 화성, 군포 등에 연달아 출사표를 냈다.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연구원은 경기 화성읍에 출마한다. 이곳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미래대연합 의원의 지역구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다만 이곳은 인구 상한을 넘어 ‘화성정’으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민 연구원과 함께 영입된 이영훈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은 경기 군포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군포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3년 연속 당선됐다. 역시 같은 40대 청년인재인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장은 서울 성북구에 공천을 신청했다. 1988년 이후 총선에서 성북읍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은 두 번 뿐이다.

이외에도 서울 지역에 도전장을 낸 영입인재들이 더 있다. ‘이재명 저격수’ 구자룡 비대위원은 서울 양천갑 공천을 신청했다. 양천갑은 원희룡 전 장관이 당선되는 등 보수가 강세였지만,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다. 해당 지역은 국민의힘 정미경·조수진 전 최고위원이 출마 의사를 표한 곳이기도 하다.

서울 강북갑에는 전상범 전 부장판사가 공천을 신청했다. 강북갑은 전준호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이곳 역시

1996년 지역구가 신설된 이후 치러진 일곱 번의 총선에서 정양석 전 의원이 18대·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것 말고는 모두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가 이겼다.

다만, 모든 영입인재가 공천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아직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 신인인 영입인재들의 험지 출마는 ‘양지’로 향한 대통령실 일부 인사들과 대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서울 강남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등이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은 누구도 특별해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與 “메가서울·경기북도 분도 적극 추진”

한동훈, 총선 수도권 표심 공략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를 동시에 들고 나왔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메가서울’을 언급할 때는 ‘경기북도 분도’는 여당 내에서 언급이 없었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내세운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 구리에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분도를 주장하면서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맞서왔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 의정부를 출마 의사를 밝힌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당이 추진하기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며 “경기 분도를 통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새 도약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은 서울 편입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희망하는 지역은 분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메가시티와 경기 분도는 양자택일이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립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등 경기 분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 위원장에게 관련 여론은 물론 분도 의견을 개진했다”며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이 추



경기 의정부를 출마 의사를 밝힌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당이 추진하기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 대변인의 모습. /정광재 대변인

진하는 경기 분도 문제를 적극 돕겠다”고 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비대해진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행정 비효율을 없애고, 도민의 행정 편의는 물론 남북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메가서울’ 공약과 ‘경기북도 분도’ 공약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구성했다.

TF는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과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태섭 구리시 지속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유계순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주민대책위 총무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인화 도봉건축사무소 대표 ▲정경석 미사강변총연회 대표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서예진 기자